

2021년 상반기 춘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동영상 제작 적극 홍보

➡ 무료 동영상 제작 홍보 극대화로 민원 최소화 및 예산 절감

- 토지정보과 김미선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 표준지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5.13% → 9.01%) · 기존의 현수막시정소식지 등 1차원적 홍보 방식은 대시민 정보 습득 및 토지 재산 가치 확인할 기회 부족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햄스가 땅 정보통!)을 활용한 적극 홍보 진행 (춘천시 운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 적극 활용, 주요방송사 및 신문사 등) ※ 강원도 최초 개별공시지가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알기쉬운 문구와 영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홍보 극대화로 민원최소화 ·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신뢰성 제고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업무 협약을 통한 무료 영상 제작으로 예산 절감



② 취득세 상생징수 방안 마련으로 재산권 행사 및 세입증대

▶ 적극적 법률 검토로 취득세 조기 징수로 시 수입 증대 및 재산권 해결

- 징수와 김상훈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아파트 입주 후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의 공사비 반환 소송으로 2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 제한 · 소유권보존 등기를 위한 준공 인가는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취득세는 조합 통장 압류로 납부 불가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부 기한('21.6.8.) 경과 후 수시분 고지서 발송,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 9월 이후 압류 가능하나 '납기 전 압류' 추진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증가액(71백만원)을 사전 예방하는 상생 징수 실현 · 적극행정과 선제적 대응으로 취득세(10.8억원)를 조기 징수 하여 시 수입 증대(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에 기여

江原日報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지역 16면

춘천시 적극 행정 1,795세대 재산권 해결

후평동 A아파트 입주 2년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
시 취득세 10억8,000만원 조기 징수 효과도 거둬

【춘천】춘천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2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로 있던 아파트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길을 열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입주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됐고 시는 조기에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는 평가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후평동 재건축 아파트인 A아파트 주민들이 2019년 7월 입주했으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이해관계와 소송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일사아용 승인

후을 2월8일 준공 인가통 고시하고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과 등에서 조합 측 압류가 가압류돼 이달 부과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1,795세대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에 취득세 강제 징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민원 내

용을 적극 검토해 입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시는 취득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9월해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민원 회신을 했었지만,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시는 '강제집행을 받아 지분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납기 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착안해 취득세 10억8,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길을 열었고 1,795세대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의 함로도 갖게 됐다. 오금자시 징수과정은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감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 징수 방안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5.2*8.7)cm

③ 적극적인 재건축 아파트 준공인가 및 신속한 이전고시 처리

➡ 적극·신속한 업무처리 노력으로 재산권행사 해결로 입주자 불안해소

- 건축과 권민성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9. 도로개설 미완료로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 `20.9월 도로개설 완료 후 시공사와 조합간 민사소송으로 준공인가 신청서 도장날인 및 시공관계서류 제출 등 시공사 협조 불가 · 임시사용승인 후 1년 6개월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불가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됨(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인가 신청 시 시공사 협조(도장날인 등)가 필수인지 검토 · 준공인가 거부 시 입주자의 피해 및 우리시 귀책사유 검토 ·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위 검토사항에 대한 법리 적정성 최종 검토 후 준공인가 처리(`21.2.8.) · 준공인가 조건(토지분할) 이행확인 후 이전고시 신속처리(`21.4.8.)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8. 준공인가 및 `21.4.8. 이전고시 완료로 재산권행사(등기)가 가능하여 입주자 불안해소

江原日報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지역 16면

춘천시 적극 행정 1,795세대 재산권 해결

후평동 A아파트 입주 2년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져
시 취득세 10억8,000만원 조기 징수 효과도 거둬

【춘천】춘천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2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로 있던 아파트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길을 열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됐고 시는 조기에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 일석여조의 효과를 거뒀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후평동 재건축 아파트인 A아파트 주민들이 2019년 7월 입주했으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이해관계와 소송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임시사용승인

후을 2월8일 준공 인가를 고시하고 지난 8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 예산이 가압류돼 이달 부과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1,795세대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에 취득세 강제 징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민원 내

용을 적극 검토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시는 취득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9월해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민원 화산을 했었지만,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시는 '강제징수를 받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납기 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착안해 취득세 10억8,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길을 열었고 1,795세대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의 첩로도 찾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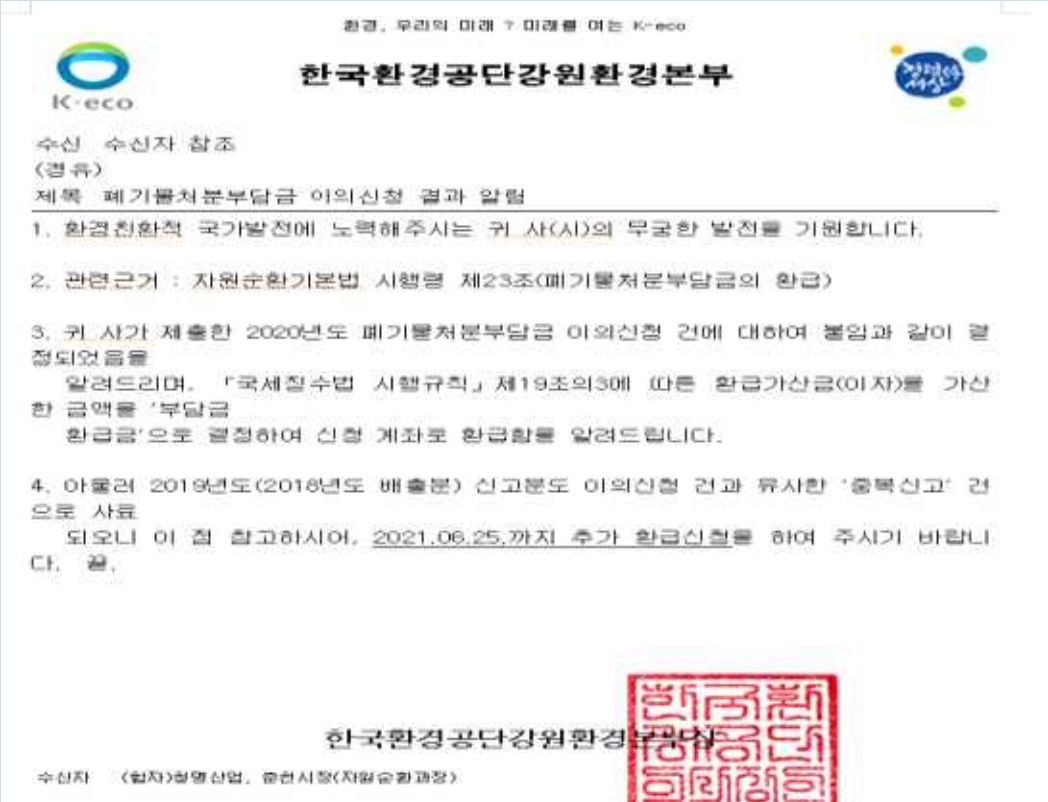
오급자시 징수과장은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감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 징수 방안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심은석기자

(25.2×8.7)cm

④ 폐기물처분부담금 중복 부과·납부 절차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

↳ 중복 부과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취소·환급으로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 자원순환과 김민정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가 '19년도 소각·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39,336,960원)부과 → 대행업체에서 납부를 위한 부과금 청구 → 환경사업소의 실적보고서 확인 후 해당 금액 기 지급 · 춘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중복 부과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공단에 이의신청 및 환급 자료 제출 · 환경공단 및 환경사업소 담당자와 지속적인 중복 부과 설명 및 입증 (이의신청 수용 → 부과 취소 결정 → 납부금액 업체에 환급 → 춘천시 환급) · '18년도 부담금도 중복 부과로 환급 예정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공단의 부과 취소 결정과 환급금 세외수입 처리로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p>환경, 우리의 미래 ? 미래를 여는 K-eco</p> <p>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p>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결과 알릴</p> <p>1.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노력해주시는 귀 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p> <p>3. 귀사가 제출한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환급가산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신청 계좌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p> <p>4. 아울러 2019년도(2018년도 배출분) 신고분도 이의신청 건과 유사한 '중복신고' 건으로 사유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2021.06.25.까지 추가 환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다. 끝,</p> <p>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장</p> <p>수신자 (원자)정명선업, 춘천시청(자원순환과장)</p>